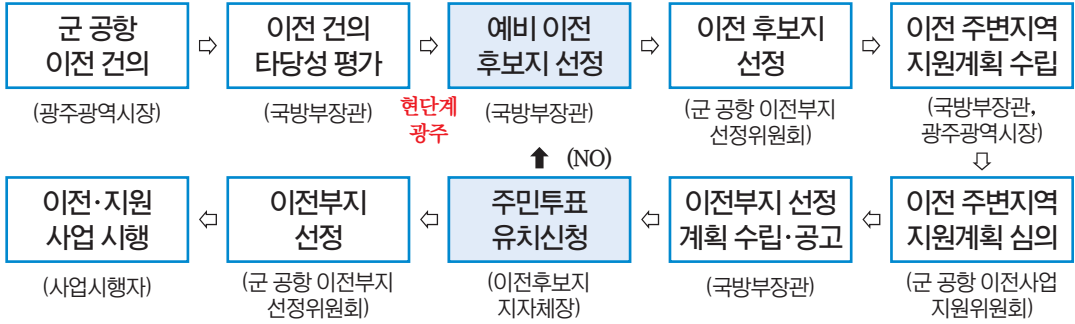


“군 공항 결사 반대” 구호에 묻힌 이전 찬성 목소리

■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난항 왜?

국방부, 지자체 강력 반대에 이전 설명회조차 못 열고 선정 미뤄
“인구유입 대책·개발계획·미래 먹거리 산업 제시해달라” 목소리도

■ 군공항 이전 사업절차



2016년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결과 ‘적정 판정’이 나왔으나 사업은 수년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이전 대상 후보지 기초단체장과 주민 반발을 이유로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모두 제대로 된 군공항 이전 사업 설명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전지역 부지개발 계획, 인구유입 대책, 지속가능 미래전략산업 투자 등이 담긴 구체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군공항 이전 결사 반대’라는 강경한 목소리에 묻히는 모습이다.

◇‘미래 청사진 제시하라’, ‘군공항 결사 반대’ = 광주시가 2019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은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전남 기초자치단체 A군에서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목소리로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 결사 반대”, “국방부, 광주시의 설명조차 듣고 싶지 않다”는 강경한 목소리만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것을 고려하면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지난해 12월 광주시 공무원들을 만난 A군 지역 상인들은 대체로 군공항 이전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군 관사가 들어서면 인구 증가로 마을이 활기를 띄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주민 일부는 광주시가 군공항이전 대상지 주변 주민지원 사업비로 책정한 4500억원을 기반시설 조성비로 인식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책사업임에도 뒷받침 받고 있는 국방부는 주민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이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가부대양여(광주시에 신공항 건설과 주변 주민 지원사업을 펼치고, 사업비는 군공항 부지 개발로 충당) 방식으로 추진되더라도, 주민 지원 사업비 부족시 국비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올 1월에는 A군 주민 일부는 “국방부와 광주시가 부지개발 계획, 인구유입책, 미래전략산업 투자 등 미래 청사진이 담긴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마련해 군청과 주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며 “국방부와 광주시는 추상적 내용이 아닌 구체적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에 광주시 공무원들에게 피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軍) 작전성 검토가 통과된

기초단체에서 모두 반발 여론이 크니, 광주시가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국방부 요청을 받고 주민 의견을 듣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 찬반과 관계없이 국방부와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사업 어디까지 왔나 = 광주 군공항 이전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이전은 군 공항 이전 건의(광주시)→이전타당성 검토(국방부)→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이전후보지 선정(이전후보지 선정위)→주민투표/유치신청(이전후보지 단체장)→이전부지 선정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광주 군 공항의 경우 2014년 이전 건의서 제출, 2016년 군 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적정통보)를 받았지만, 반발 여론을 의식한 국방부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미루면서 껍데기만 채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로, 현재 전남도와 민간공항 이전 협의를 벌이고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과 별개로 사전에 약속한 대로 광주공항(민항)은 무안공항과 통합시키겠다는 게 광주시 입장이다.

최근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조만간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점도 국방부가 이전과 달리 군 공항 이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다.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돼 국방부로서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국방부에 따르면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의성과 군위군이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군공항 이전 주변 사업비는 광주보다 1500억원가량 적은 3000억원 수준이지만 의성, 군위군 측은 노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기초단체 소멸 경고음이 커지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공군 훈련기가 광주시 광산구 광주군공항 활주도에 착륙해 이동 중인 모습.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이 이전 대상 후보지 지자체와 주민 반발로 표류하며 지역 갈등을 키우면서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모두가 함께하는 지스트 과학문화주간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미디어 파사드 공연

3회

11. 6.(수) 21:00

11. 7.(목) 19:30

11. 8.(금) 18:00

지스트
중앙도서관(N1) 앞

11. 4. 월

Start-Up Night
시간 : 19:30~23:00
장소 : 오흥관(W1) 다목적홀, 야외광장

11. 5. 화

2019 광주창업포럼 로드쇼 in 지스트
시간 : 10:00~12:00
장소 : 오흥관(W1) 103호

GIST CEO 포럼
시간 : 10:00~19:00
장소 : 오흥관(W1) 다목적홀

11. 6. 수

지스트 무비데이(빅히어로)
시간 : 19:00~21:00
장소 : 중앙도서관 (N1) 2층

11. 7. 목

학생축제(초청가수 공연 및 불꽃놀이)
시간 : 15:30~
장소 : 지스트 야구장
(대학기숙사 A동(E11) - 고등광기술연구소(E5) 사이)
초청가수 : 윤하 / 케이시 / 비와이 / 베이식

배움마당 교류행사
시간 : 16:30~19:30
장소 : 오흥관(W1)

11. 8. 금

2019 문화행사(포레스텔라)
시간 : 17:00~18:00
장소 : 중앙도서관(N1) 앞 잔디밭

2019 지스트 후원의 밤
시간 : 18:30~19:50
장소 : 오흥관(W1) 다목적홀

2019 지스트 컨퍼런스(총동문화 행사)
시간 : 13:30~20:00
장소 : 오흥관(W1) 및 제1학생회관(W6)

11. 9. 토

첨단과학 골든벨 대회(북구청 주관)
시간 : 14:00~16:00
장소 : 지스트 체육관(W2)

11. 15. 금

2019 GIST Culture Night(외국인 학생축제)
시간 : 17:00~20:30
장소 : 오흥관(W1)

「지스트 과학문화주간」 주제로 제작한 유튜브(1~2분 영상) 공모전 진행
자세한 내용은 **GIST 홈페이지** 참조
문의 지스트 홍보팀 062)715-2061~3

GIST

광주과학기술원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일정상 환담 ... 악화일로 한일관계 반전 맞나

“관계 악화 방지 안된다” 공감 ‘툭다운’ 방식 해결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3개월 여만에 직접 소통에 나서면서 악화 일로를 걷던 한일 관계가 반전을 맞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별도의 만남을 가진 것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및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상황에서 더이상 관계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양국 현안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번 환담에 앞서 양국은 이미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지난 달 24일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일 총리 회담에서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 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고 아베 총리도 이에 화답했다. 이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문은 닫지 않은 문 대통령과의 인내가 소기의 성과를 낳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일 모두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작게 점쳤으나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약식회담’에 가까운 대화를 나눈 만큼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라는 분

석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양 정상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고 대변인은 “양 정상은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 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의 협의를 갖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한일 정상 환담이 향후 한일 관계 개선에 미칠 영향력을 가늠할 첫 시험대는 종료 시한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가 될 전망이다.

수출규제 문제의 경우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데다 일본의 태도 역시 완강해 최종 해결까지 장기전이 예상되는 반면, 지소미아는 양국의 결단에 따라 종료 전 연장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다.

미국이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안보 공조를 위해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 다른 현안의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이 이번 환담을 계기로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정식으로 정상 회담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고 대변인은 “(정상회담)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양 정상 간 오랜만의 만남이 대화를 통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